

기고

김찬홍 고흥군 선거관리위원회 회계주무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위하여

깨끗한 물이 담겨있는 컵에 모래를 조금씩 넣는다고 생각해보자. 투명하고 맑았던 물이 모래로 인해 그 투명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혼탁해진다. 조금씩 떨어트릴 때마다 모래는 물을 오염시키고 어느새 흙탕물이 되고 만다. 이 더럽혀진 물을 어떻게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미 가라앉아버린 모래를 다시 폐내려고 하면 모래는 페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컵이 되고 말 것이다. 대신, 깨끗한 물을 얻기 푸부으면 어쩔까? 더러워진 물을 예전 상태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번씩 부울 때마다 모래는 조금씩 넘쳐흘러 결국에는 깨끗하고 투명한 예전

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지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정치후원금은 기탁금과 후원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후원금이란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빙을 경

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후원금은 개인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후원회마다 각 5백만원 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나누어 기부가 가능하다.

기존의 법인·단체·특정 개인·계층에 의존한 정치자금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수뢰,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져왔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단체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유입을 전면 차단하고, 개인이 제공하는 소액다수의 투명한 정

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일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로 정치후원금 센터를 통해 계좌이체, 휴대폰 등의 방법으로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지만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금융간접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지금 속에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한다면 깨끗한 정치에도 기여하고 또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15% (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야말로 1석 2조가 아닐까.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반대하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조그만 돈이지만 우리의 작은 정치후원금이 바다에 가라앉은 기존의 폐해와 불순물을 정화시키는 소중한 밀거름이 된다. 소중한 정치후원금으로 정치인들이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

社說

경찰 전문수사관제 도입해야

수사의 전문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특히 경경 수사관 조정 문제가 화두가 돼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더욱 그렇다. 과거에는 강 압수사 등 고질적인 병폐가 적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전문성 부족에 뒤떨어진 민주성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찰이 뒤늦게나마 전문수사관제를 시행한다니 여기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경찰이 올해 전문수사관 598명을 선발했다. 전문수사관은 경찰이 시행 중인 분야별 전문성 인증 제도인데, 향후 수사팀장 자격 요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90개 분야 전문수사관 598명을 선발했다. 분야별로는 수사 136명, 형사 132명, 생활안전 97명, 교통 91명, 시아비 40명, 외사 8명 등이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았다. 또 증거분석 부문에서 과학

수사 45명, 사이버 11명 등이 선발됐다.

이번 전문수사관 선발은 지난해 큰 규모의 제도 속чин 이후 두 번째 이뤄진 것이다. 특히 학교 폭력, 마약사범 분야가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고 한다.

전문수사관은 수사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한 인증 제도로 2005년에 도입됐다. 2005년 이후 올해까지 인증자 수는 3865명으로 집계된다.

경찰은 지난해 수사 전문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별위를 88개 분야로 늘리는 등 인증제를 확대, 세분화 했다. 이는 수사권 구조 조정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평가받는다.

경찰은 오는 2025년 수사팀장 자격 요건에 전문수사관 인증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수사 경과 제도 등을 강화하고 수사부서 팀·과장 자격제를 도입해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화, 우리 모두가 함께 막아야

최근 차갑고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공공위험에 관한 반사회적 범죄인 방화 또한 증가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얼마전 서울의 한 독서실에서 는 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사람이 화기로 자신의 속소에 방화하여 한밤중에 3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다행히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화재였다.

방화는 과실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실화와 달리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공의 안녕질서를 극도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재산 등에 위

험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강력 범죄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등 중형에 처하고 있으며 방화범의 90% 이상이 겸거되고 있다고 한다. 방화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이며, 누군가에게 가슴아픈 현실을 가져온다. 그렇다면 방화의 최선책은 무엇일까?

우선 방화사건의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한 화재라는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소방은 물론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예방활동과 시민들의 철저한 감시 활동으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CCTV의 적극 활용과 철저한 화재원인 규명으로 방화사범 검거를 위한 투대를 마련하고, 방화 예방을 위해서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사람, 방화 전과자들을

특별 관리 하는 방안도 추진해야만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방화범죄에 대한 예방은 행정기관만의 역할만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을 것이다. 도민들의 의 방화 범죄에 대한 적극적 감시 활동, 빠른 신고 및 초동조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 공감대 조성 및 혁신과 시스템의 운영이 병행돼야 소기 목적 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방화는 주로 범죄를 은폐하거나 보복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방화와 사회 불안, 기정불화, 호기심 충족, 정신병자등에 의한 우발적 방화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노리거나 범죄를 위한 3자에 의한 방화가 다수인데 반해, 우리나라에는 순간의 충동이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하는 방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불화 등으로 부부싸움 끝에 자신의 신체에 불을 지른 경우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우리 소방대원들은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화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다함께 관심을 갖고 쉽게 불을 지를 수 있는 쓰레기, 폐기물 등 가연성 물질을 무심코 노상에 방치하여 방화 또는 불장난의 빌미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방화로부터 일상생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기정이나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지휘팀장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기출인신고	182	▲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신고	383-0019

긴급전화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반)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호남신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대표전화 (062) 229-6000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고국 (062) 224-5800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팩스 (062) 222-5547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